금주의 법구-〈법구경〉
세상은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대는 암흑에 둘러싸여 있구나.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는가.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1월 9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5호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탈북민 종교지형 변화… '조사시설 · 하나원' 포교기지로

〈2016 북한 종교자유 백서〉 살펴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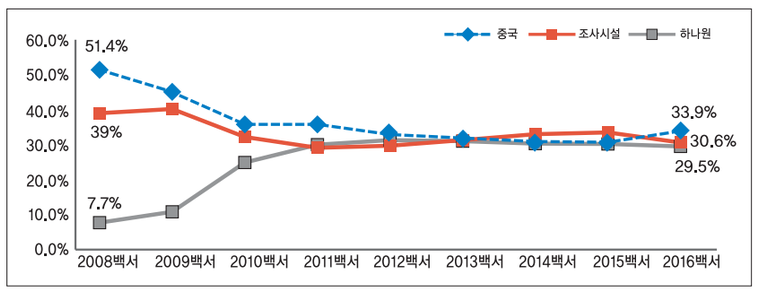
탈북민들이 과거엔 '중국 체류기간 동안' 종교 활동을 시작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반면, 최근엔 남한 입국 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조사시설) 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서 시작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조계종 포교원도 이 두 곳을 중심으로 탈북민 포교를 적극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1월 9일 〈2016 북한 종교자유 백서〉를 발간했다. 이는 북한의 종교자유 수준을 측정키 위해 탈북자 총 1만1,730명(남2,623 · 여9,096 · 미상11)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발간된 자료다. 조사 대상자는 북한 종교의 가장 최근 동향을 파악키 위해 2007년~2016년 4월 입국한 탈북자로 한정했다.

탈북민들의 종교활동 시작 시점을 조사한 결과, '조사시설서부터'라 응답한 자가 2,791명(33.9%), '중국에서부터'가 2,518명(30.6%), '하나원서부터'가 2,435명(29.5%), '중국 외 제3국에서부터'가 344명(4.2%), '북한에서부터'가 154명(1.9%)으로 나타났다. '남한 입국 전후' 비율로 비교 시 '중국에서부터' 포함 입국 전 종교활동을 시작한 비율은 36.6%이며, 입국 후 비율은 63.4%다. 앞서 2008년 백서에선 '중국에서부터'가 51.4%, '조사시설서'가 39%, '하나원서'가 7.7%로 집계됐다.

이는 조사시설과 하나원이 탈북민의 종교생활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방증한다. 이 근거에 대해 백서는 △최근 입국자의 경우 중국 체류 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은 점 △중국 당국이 탈북자에 대한 종교기관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점 등을 제시했다.

탈북민 종교활동 시작 지점 변화



"입국 후 종교활동 시작" 늘어
'중국부터' 응답자 20%로 축소
"입국후 포교 지원 체계 갖춰야"
포교원, 12월 '새터민전법단' 창립
내년 2월 포교 교재 발간 계획도

이에 따라 불교계엔 조사시설과 하나원을 중심으로 탈북민 포교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조사시설과 하나원서는 조계종 포교사가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를 진행한다. 다만 조사시설엔 불상이나 법당이 따로 마련되지 않고, 종교의식도 불가하다.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종교인들이 각 종교의 기초교리를 전달하는 수준이다.

現 조사시설 담당자 권영익 포교사(포교사단 통일분과위원장)는 "조사시설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종교행위가 불가능하단 한계가 있다. 나눠주는 인쇄물에 대한 보안규정도 엄격한 편"이라며 "비교적 외부 지원이 자유로운 하나원을 중심으로 탈북민 포교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홍성란 하나원 상임포교사는 이웃종교는 조사시설에 성직자들을 파견하는 반면, 불교는 스님들은 파견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홍 포교사는 "하나원과 마찬가지로 조사시설에도 스님들이 파견돼야한다"며 "스님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탈북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의지처가 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조사시설 담당 포교사가 주기적으로 바뀌는 시스템을 보완,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갈 상임포교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조계종 포교원은 12월 중 '새터민 전법단'을 꾸리고 조사시설과 하나원에 대한 포교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병주 포교원 전법팀장은 "새터민 전법단이 출범하면 하나원 뿐 아니라 조사시설로도 활동영역이 확장될 것"이라며 "아울러 내년 2월 중 탈북민들을 위한 포교 교재가 발간된다. 교재가 하나원과 조사시설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할 것"이라 밝혔다. 포교원 측에 따르면 그간 △어린이분야 △군분야 등 특화 교재는 있었지만, 통일분야 교재가 별도로 발간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탈북민 중 불자인구 비율은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응답자 1만1,030명 중 불교는 1,190명(10.7%)으로 10년전인 1997년 6.9%보다 증가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파사의 연등, 촛불과 하나되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11월 26일 5차 촛불행렬서 파산현정의 연등이 길을 밝혔다. 촛불행렬의 선두에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을 비롯해 해인사와 동화사, 동국대, 중앙승가대 등 전국 각지에 온 스님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사진은 청와대 동측 입구가 있는 삼청동에서 행진하는 스님들과 환호하는 시민들의 모습. 〈관련기사 2 · 27면〉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최성규 목사 국민통합위원장 임명 철회"

종단협 등 비판 성명… 국가 정상화 결단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 위원장에 최성규 목사 임명에 대해 불교계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12월 1일 '최성규 목사 국민대통합위원장 임명에 대한 불교계 입장문'을 발표했다.

종단협은 입장문을 통해 "최성규 목사는 과거 부적절한 편향발언으로 민심을 분열시킨 논란의 장본인이다. 가족을 잃은 세월호 유족의 마음에 못을 박는 실언과 전직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이라는 발언으로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군사쿠데타를 역사적 필연이라고 미화하는 등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시켰다"면서 "최성규 목사는 국민대통합위원장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이다. 최 목사에 대한 임명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 정국 상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깊게 고심해 국가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도 12월 1일 비판 성명을 내고 "편향된 역사관과 종교관을 대표하는 인물을 국민통합의 얼굴마담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오로지 일부 종교단체의 지지로써 위기를 탈출하고자 있다"고 비판했다.

신성민 · 윤호섭 기자

사찰 옥죈 '사찰림 규제' 풀렸다

국회, 산지관리법 개정… 사찰림 內 시설 설치 가능

사찰의 신축만 가능했던 사찰림에 납골당 등 봉안시설과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11월 17일 본회의에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전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사찰림은 공익용산지로 이 공익용산지에서는 사찰 신축은 가능했으나 이외의 시설 설치는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찰림 내 사찰 신축 이외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찰림 규제가 풀림에 따라 종단과 각 교구별 활용 내규를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종수 스님은 "공청회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종단과 본사에서 지침과 함께 사찰림 활용 교육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사찰림 연구 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활용법을 연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사찰 등이 종교부지 목적으로 점유한 국유림을 대부 계약한 후 5년 경과시 교환이 가능하도록 임시특례를 주기로 했다.

2015년 9월 28일부터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유림법 부칙에는 종교부지 목적으로 국유림을 10년 이상 무단 점유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교환 가능에 대한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수련시설 등 사찰 기능 향상
종단 · 교구별 활용 내규 필요
점유 국유림들 교환 특례도

이번 교환 가능 특례에 따라 과거 측량기술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유림을 무단점유한 사찰은 장기적으로 토지 소유권도 확보할 수 있어 사찰 보호 및 발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정상 대부토지의 경우 교환대상이 되며 무단점유 토지의 경우 2017년 9월 27일까지 자진신고가 필요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